KIEP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2026년 2월 12일 Vol. 9 No. 7 ISSN 2635-5981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장 (jcheo@kiep.go.kr, 044-414-1042)
이보람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044-414-1045)
이정은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e@kiep.go.kr, 044-414-1236)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중의원 선거 결과
2. 주요 정책 및 전망
3. 시사점

주요 내용

▶ 2026년 2월 8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정권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하여 전체 중의원 의석 수(465석)의 과반(233석)은 물론, 전후(戰後)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3분의 2(310석)가 넘는 의석 수를 얻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둠.

▶ 향후 고물가 대책과 경제성장 전략, 안보 관련 법제 정비 및 외국인 정책 등에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적 색깔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고물가 대책]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전제로, 현재의 음식료품 소비세 8%를 2년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임.
- [성장 전략]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반성과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주도의 '위기관리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일본성장전략본부'가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경제안보]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제정)」을 연내에 개정하고, 인텔리전스(intelligence) 기능 및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등 경제안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
- [외교·안보] '방위 3문서(防衛三文書)'의 연내 개정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나,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
- [사회보장]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유지,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을 '공생(共生)' 중심에서 '질서와 관리'를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

▶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정책 방향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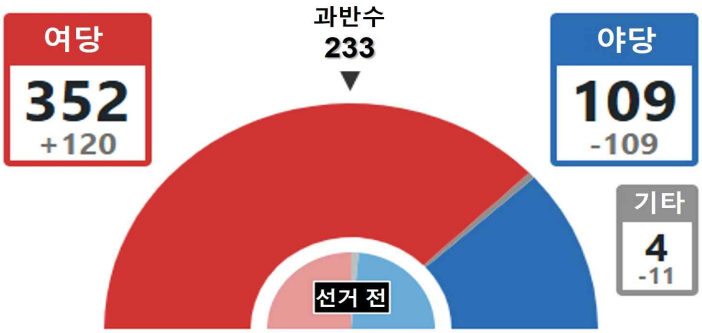
-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관계 중시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견제 세력의 약화를 배경으로 여당 내부의 일부 극우적 이념과 역사관이 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경우, 한일 관계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에서는 AI·반도체·조선·양자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로 한일 간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본정부가 향후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이를 우리의 외국인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중의원 선거 결과

■ 2026년 2월 8일 실시된 일본의 제51회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自由民主党)이 압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정권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하여 전체 중의원 의석 수(465석)의 과반(233석)은 물론, 전후(戰後) 처음으로 단독으로 3분의 2(310석)가 넘는 의석 수를 얻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둠.
  - ○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와 의석 수를 합칠 경우, 여당의 의석 수는 총 352석으로 선거 전보다 120석 증가함.
  - ○ 반면 이번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과 공명당(公明党)이 연합하여 결성한 '중도개혁연합(中道改革連合)'은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패했고, 신생 정당인 참정당(参政党, 2석→15석)과 팀미라이(チームみらい, 0석→11석)가 약진함.

그림 1. 2026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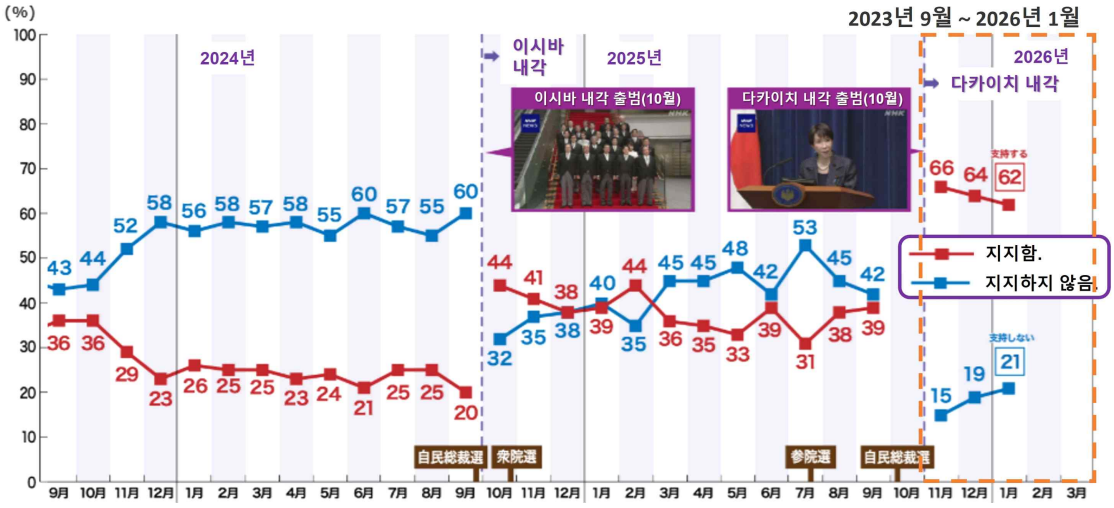


자료: 読売新聞(2026. 2. 9.),「衆院選 2026」,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검색일: 2026. 2. 9.)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 이번 중의원 선거는 다카이치(高市 早苗)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이용하여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하고자 지난 1월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함에 따라 실시되었고, 정책보다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인기가 선거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1)]
  - ○ 다카이치 내각이 작년 10월 출범 이후 줄곧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온 가운데(그림 2 참고),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기간 동안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서 괜찮은가,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몰아감.
  - ○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선거 공시 직전에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하며 여당에 대항하려 했지만, △양당 사이의 정책 차이와 △신당의 목적·이념 등의 불분명, △짧은 선거 기간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음.
  - ○ 입헌민주당의 경우,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아즈미 준(安住淳),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등 간판 중진 의원들도 낙선하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함.

1) 読売新聞(2026. 2. 9.),「「高市人気」で政権基盤強化に成功した首相「責任ある積極財政」など推進へ…消費税減税への対応も焦点に」,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260209-GYT1T00243/(검색일: 2026. 2. 9.).

그림 2. 최근 일본의 내각 지지율 변화(2023년 9월~2026년 1월)



자료: NHK(2026. 2. 2.),「内閣支持率」, https://news.web.nhk/senkyo/shijiritsu/(검색일: 2026. 2. 9.)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일본유신회와 연립 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 수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및 관련 법안이 설령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경우 성립될 수 있음.
  - ○ 고물가 대책과 안보 관련 법제 정비, 사회보장제도 및 외국인 정책 등에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적 색깔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참의원이 여전히 여소야대 국면인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미중 양국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정권 운영에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선거 기간 중에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나온 후 SNS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립정부를 지지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으며, 여러분이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의제를 추진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2)]
  - ○ 중국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2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집권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고 직시하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중일 4대 정치 문서를 준수하며 양국 사이의 신의를 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며, "일본 극우 세력이 정세를 오판하여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일본 국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냄.[3)]

2) "New Trump Truth Social Post on HUGE Landslide for Big Ally in Japan," https://x.com/TrumpDailyPosts/status/2020645525046116829?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2. 9.).
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6. 2. 9),「2026年2月9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

2. 주요 정책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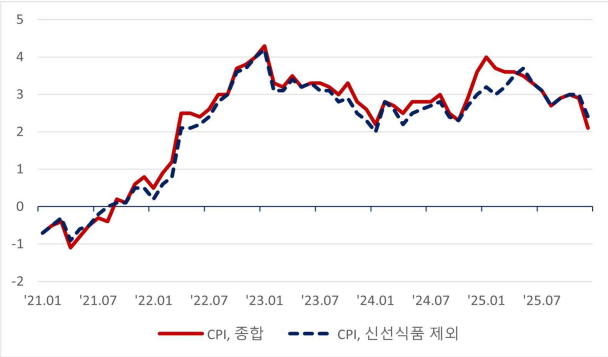
가. 경제정책

■ 일본은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소득 증가가 지연되면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는 2025년 평균 3.1%를 기록하며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함.
  - ○ 2025년 12월 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고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임.[4)]
- 명목임금은 2025년 11월까지 평균 2.2%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상승에 머물러 있음.

그림 3.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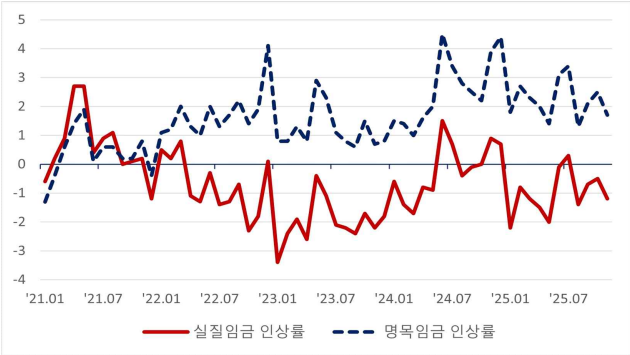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비, %)



자료: 総務省,「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검색일: 2026. 2. 3.).

그림 4. 일본의 임금지수·실질임금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주: 실질임금지수(종합 CPI 기준 환산); 임금지수(종합 CPI 기준 환산).
자료: 厚生労働省,,「毎月勤労統計調査」(검색일: 2026. 2. 3.).

■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5)]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대담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세수 증가를 추가 투자로 연결하는 '투자-성장 선순환'을 구축할 방침

- 다카이치 내각은 한시적 소비세 감세, 급부형 세액공제(給付付き税額控除), 에너지·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임금 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6)]
- 기초적 재정수지(PB)에 대해서는 단년도 흑자 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개선 경로를 관리하고,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재정 규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674889/202602/t20260209_11854350.shtml(검색일: 2026. 2. 9.).

4) 최근의 물가상승률 안정화의 원인으로는 식료품 가격 상승률 둔화, 고물가 대책 차원의 휘발유·전기·가스 보조금 등이 거론됨. 新家義貴(2026. 1. 30.),「消費者物価指数(東京都区部 · 2026年1月)」, 第一生命経済研究所.

5)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물가·소득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 지출과 재정 규율 유지라는 '책임'을 동시에 구사해 단기 안정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추구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의미함. 永濱利廣(2026. 1. 13.),「新たな財政目標指標の提案とその意味合い」, 第一生命経済研究所.

6) 首相官邸,「「強い経済」を実現する総合経済対策」,https://www.kantei.go.jp/jp/headline/sougoukeizaitaisaku2025/bukkadakataiou.html (검색일: 2026. 2. 9.).

■ 자민당은 음식료품 소비세 8%를 2년간 한시적으로 0%로 감세하는 것에 대해 초당파로 구성된 '국민회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 이는 '재원 대책 없는 감세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보다 임금 인상·구조 개혁 기반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자민당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정책 방향임.
  - ○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를 저소득·중산층 지원 목적의 '급여형(환급형) 세액공제(給付付き税額控除)'[7]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과도기적 조치로서 검토하고 있음.[8]
  - ○ 자민당은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지하지 않고 세외수입, 보조금·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9]
- 소비세 감세는 자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의 공통된 공약으로,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의 영구폐지를, 국민민주당은 실질임금이 상승될 때까지 소비세 일괄 5% 인하를, 참정당은 소비세의 단계적 폐지를 각각 공약했음.
  - ○ 일본 정당 중 유일하게 팀미라이가 현행 세율 유지를 주장함.
  - ○ 소비세 감세는 2025년 참의원 선거 당시 핵심 쟁점이었으나, 이후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아진 바 있음.
- 재원 대책 없는 감세 조치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 일본의 소비세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의 주요 재원으로 알려져 있음.
  - ○ 연간 5조 엔(실질 GDP 대비 0.85%) 상당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음식료품 소비세 면제는 가처분소득의 일시적 증가(실질 GDP의 0.05~0.33% 상승) 효과가 예상되나, 지속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소멸하지만 재정부담은 지속되는 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음.[10]

■ 예상을 뛰어넘은 압승으로 정권 기반 강화에 성공한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만큼, 일본의 재정정책은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에 집중하는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규율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해 과도한 재정 지출은 지양할 것으로 전망[11]
  - ○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유지·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12]
  - ○ 선거 결과에 대한 환율과 채권시장의 반응(2월 9일)은 비교적 제한적[13]이었는데, 자민당의 압승이 과도한 재정 팽창에 대한 우려를 낮추며 금리 상승 및 엔화 약세 압력에 안정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14]

---

7) 급여형(환급형)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세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액공제와 현금성 지원이 결합된 제도를 지칭함.
8) 「自民党勝利で高まる財政膨張圧力 消費減税に財源の壁、市場の信認試す」(2026. 2. 8.), 『日本経済新聞』.
9) 「消費税減税に3つの論点 年5兆円の代替財源 レジ改修 外食離れ」(2026. 2. 9.), 『日本経済新聞』.
10) 「消費税減税、「5兆円の請求書」を巡るチキンレース 危うい横並び」(2026. 2. 2.), 『日本経済新聞』.
11) 「自民党勝利の衆議院選挙、経済学者 エコノミストはこうみる」(2026. 2. 8.),『日本経済新聞』.
12) 「高市首相が記者会見「政策転換へ力強く背中押してもらった」 衆院選圧勝」(2026. 2. 9.), 『日本経済新聞』.
13) 2021년 1월 6일 30년, 4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각각 2.274%, 2.583%였으나, 2026년 1월 20일에는 각각 3.765%, 3.901%로 고점을 기록함. 財務省.「国債金利情報」(검색일: 2026. 2. 9.).
14) 2026년 2월 9일 국채금리는 10년 만기 2.289%(전일 대비 +0.053%p), 40년 만기 3.63%(전일 대비 -0.002%p)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변동성은 제한적이었음. 財務省.「国債金利情報」(검색일: 2026. 2. 10.); 嶌峰義清(2026. 2. 9.), 「総選挙後の市場(株 金利 ドル円)予想」, 第一生命経済研究所.

- 선거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급여형 세액공제와 함께 '국민회의'에서 논의하고, 여름 전에 제도 설계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하겠다고 밝힘.[15)]
  - ○ 소비세 감세를 둘러싸고는 △대체 재원 확보, △슈퍼·편의점 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외식산업(면세 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영향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음.[16)]

나. 성장전략

■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17)]은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반성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주도의 전략적 방향 설정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함.

-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구조 개혁이나 민간 주도형 성장전략과 달리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성장전략을 표방함.[18)]
- 또한 기시다 내각에서 강조한 '새로운 자본주의'[19)]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위기관리투자와 경제안보를 중시한 성장을 국가전략으로서 보다 강조함.
  - ○ 다카이치 내각은 민간투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투자 확대를 주도할 방침[20)]

■ '위기관리투자'를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고 일본이 직면한 국가 리스크, 사회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본의 생산·공급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강한 경제'를 실현할 방침임.

- '위기관리투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재정 지출 및 세제 조치인 동시에 과제를 해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성장투자'를 지칭함.[21)]
- 일본정부는 복수 연도 예산 조치 및 세제 조치 등을 활용해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투자를 촉진할 방침임.[22)]
  - ○ 2025년 추가경정예산(補正予算)에는 조선산업의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10년 장기 기금 조성을 포함해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를 중심으로 한 총 6.4조 엔 규모의 복수 연도 예산 조치가 반영됨.
  - ○ 2026년 세제 개정에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담한 설비 투자촉진세제' 내용이 포함됨.[23)]
  - ○ 양자기술, 우주, 핵융합에너지 등 고난도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세제 강화가 제시됨.

---

15) 「高市早苗首相の9日の記者会見要旨 衆議院選挙受け」(2026. 2. 9.), 『日本経済新聞』.
16) 「消費税減税に3つの論点 年5兆円の代替財源 レジ改修 外食離れ」(2026. 2. 9.), 『日本経済新聞』.
17) 성장전략은 본래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의미하지만, 최근 일본 정책 체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종합한 공식 정책 문서를 가리킨다. 玉置浩平(2025. 11. 20.), 「 高市政権の成長戦略と危機管理投資 「新しい資本主義」のアップデートとしてのサナエノミクス」, 丸紅経済研究所.
18) 玉置浩平(2025. 11. 20.).
19) 민관 연계에 기초한 투자 확대를 강조.
20) 「AI 半導体 エネルギー安保…17分野に官民で重点投資 成長会議始動」(2025. 11. 4.), 『日本経済新聞』.
21) 여기에서 리스크 대응은 불확실성 대응 차원을 넘어, 필수 물자의 국내 생산과 재난·건강의료·에너지·식량·사이버를 포괄하는 국가안보 관점을 포함함. https://storage2.jimin.jp/sousai21/pdf/takaichi_sanae.pdf.
22) 首相官邸(2025. 12. 24.), 「日本成長戦略会議」.
23) 経済産業省(2025. 12. 26.), 「経済産業関係 令和8年度税制改正のポイント」.

■ 다카이치 1기 내각에서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일본성장전략본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자문기구인 '일본성장전략회의'와 전략 분야별 산관학 협의체인 소위원회를 두는 성장전략 검토 시스템을 구축함.

- 일본성장전략본부는 2026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인 일본의 성장전략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함.
  - ○ 1차 회의(2025. 11. 4.)에서는 AI·반도체를 비롯한 17개 전략 분야와 8개 분야 전반 과제를 지정[24]
- 일본성장전략본부 산하에는 자문기구로서 관계부처 대신(장관)과 민간 지식인이 참여하는 일본성장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본부에서 결정된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함.[25]
  - ○ 1차 회의(2025. 11. 4.)에서는 전략 분야에서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방안, 2차 회의(2025. 12. 24.)에서는 성장전략의 검토체제(표 1 참고) 및 전 분야에 걸친 과제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 일본성장전략회의 산하에는 전략분야분과회(의장: 관방부장관)가 성장전략 정리 및 전략 분야별 진행상황 관리 등을 담당하고, 전략 분야별로는 산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민관협의회가 있음.
  - ○ 17개 전략 분야별 담당 대신(장관)은 정부에 의한 다각적·전략적 공급력 강화방안과 정책 목표·수단이 포함된 '민관투자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
  - ○ 노동시장 개혁 등 전 분야에 걸친 과제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회가 개설됨.

■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정권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중장기 성장전략을 예산, 세제, 제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선거 후 다카이치 총리는 크게 부족했던 국내 투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26]
  - ○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한 재정 지출은 처음부터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 한편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에 대해서 생산성 제고와 인재·기술 육성을 포함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27]
  - ○ 또한 △정부투자의 효율성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 확대, △보조금 기반 산업정책에 따른 기업의 혁신 유인 약화, △위기관리투자의 수입대체 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됨.

24)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된 방위산업이 '성장전략'에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며, AI·반도체, 조선, 항공우주, 콘텐츠의 포함은 경제안보 중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Kazuto Suzuki(2026. 1. 13.), "Takaichi's Twin Challenges: Economic Growth and Security," Institute of Geoeconomics.

25) 민간 지식인 12인에는 적극재정파로 알려진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의 아이다 타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 PwC컨설팅의 가타오카 고우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경제안보(국제정치, 에너지, 국제환경 교수 및 연구원), 산업계(일본제철, ㈜일본전도공업, ㈜시나몬 등), 노동계(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경제계(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인사들이 포함됨.

26) 「高市首相が記者会見「政策転換へ力強く背中押してもらった」 衆院選圧勝」(2026. 2. 9.), 『日本経済新聞』.

27) 木内登英(2026. 1. 29.), 「【衆院選の焦点④】成長戦略で日本経済の将来を語れ」, 野村総合研究所.

표 1.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 검토 체제

일본성장전략회의 ← 연계 → **경제재정자문회의**

17개 전략분야에서 민관연계의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 촉진

전략분야분과회(분과회장: 부장관)

진행상황 관리

①AI·반도체 (인공지능전략대신,경제산업대신) - AI·반도체WG	⑩재난방지·국토강인화 (국토강인화대신, 방재대신) - 국토강인화 추진회의
②조선(국토교통대신,경제안보대신) - 조선WG	⑪신약개발·첨단의료 (과학기술정책대신, 디지털대신) - 신약개발·첨단의료WG
③양자(과학기술정책대신) - 양자WG	⑫퓨전에너지(과학기술정책대신) - 퓨전에너지WG
④합성생물학·바이오(경제산업대신) - 합성생물학·바이오WG	⑬머티리얼(주요광물·부소재) (경제산업대신) -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회
⑤항공·우주(경제안보대신) - 항공·우주WG	⑭항만물류(국토교통대신) - 항만물류WG
⑥디지털사이버보안 (경제산업대신,디지털대신) - 디지털사이버보안WG	⑮방위산업(경제산업대신, 방위대신) - 방위산업WG
⑦콘텐츠(쿨재팬전략대신) - 콘텐츠 산업민관협의회	⑯정보통신(총무대신) - 정보통신성장전략민관협의회
⑧푸드테크(농림수산대신) - 푸드테크WG	⑰해양(해양정책대신) - 해양WG
⑨자원·에너지안보·GX(경제산업대신) - GX실현을 향한 전문가WG	

전분야에 걸친 과제에 대한 대응

신기술입국(立國)·경쟁력강화 -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인재육성 - 인재육성분과회
스타트업 - 스타트업정책 추진분과회
금융 - 새로운 전략 책정을 위한 자산운용입국 추진분과회
노동시장개혁 - 노동시장개혁분과회
가사 등 부담경감 - 가사 등의 부담경감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이용 촉진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임금인상 환경정비 - 임금인상을 향한 중소기업 등의 활력 향상에 관한 WG
사이버보안 - 사이버보안추진 전문가회의

자료: 「成長戦略の検討体制」,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1053459.pdf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다. 경제안보 정책

■ 일본정부는 미중 경쟁 심화와 지정학·공급망 리스크 확대를 배경으로 경제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음.

- 경제안보의 정책 범위와 수단을 최초로 법률 차원에서 정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 5.)」 제정을 기점으로 공급망, 인프라, 중요기술 등을 안보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법·제도적 틀의 구축이 본격화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물자 확보, AI 등 첨단기술 개발 지원, 전기·가스·금융 등 기간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함.
-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단계부터 경제안보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투자와 산업 육성을 안보와 결합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제시해옴.
  - 기시다 내각(2022~24년)에서 경제안보담당대신을 역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첨단기술 보호와 대외 리스크 대응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강조해왔음.

■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경제안보상 중요한 국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임.

- AI·반도체, 에너지, 자원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위기관리투자')를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 2025년 10월 다카이치 1기 내각 출범 이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이는 자민당의 이번 중의원 선거 공약에도 상당 부분 반영됨.
  - ○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일본판 CFIUS' 설치, 경제 분야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법규제 검토 등 경제안보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할 계획
  - ○ 중요물자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서비스(용역)' 분야로 확대하고,[28] 경제안보상 중요한 해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관민 협의 플랫폼 구축, 종합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치 등을 추진
- 2026년 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 수단과 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대·보완될 것으로 전망

표 2.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공약

항목	내용
위기관리투자	· 경제안전보장, 식량·에너지·자원·건강의료·국토 강인화·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리스크 및 사회과제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추진
첨단 중요기술 보호·육성	· 첨단 중요기술 보호 및 육성(기금 활용) · 첨단 중요기술 실용화·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경제안보 싱크탱크 창설
공급망 강인화(強靭化) 및 조달 다변화	· 반도체·의약품·배터리·중요 광물·선체(船体) 등의 공급망 강인화 - 디지털화·탈탄소화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포함 공급망 강인화(생산기반 확충, R&D 지원, 인재 육성 및 인프라 정비) -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출자·융자 등 금융 지원 · 순환경제 및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K Program)' 추진 · 희토류, 구리 등 중요광물과 특정 중요물자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 강화 및 조달 다변화 · 물자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용역(서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무역·투자 관리 강화	· 안전보장 무역 관리, 첨단기술·우회 수출 대응, 관민 연계 기술 관리 · 대일외국투자위원회('일본판 CFIUS') 창설 및 대내 투자 심사 고도화
해외 사업 지원	· 경제안보상 중요한 해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위험의 일부를 부담 · 자유·민주주의·인권 가치 수호 및 유사입장국과 연계, 동맹국·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정	· 기간 인프라(사회 기반) 산업에 대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한 제도 집행
인텔리전스·전문 인재·데이터	· 경제안보 위협·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분야 인텔리전스(intelligence) 강화 · 전문 인재 육성, 관민 연계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중요 데이터 취급자 및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논의

자료: 自民党(2026. 1. 21.), 「第51回衆議院選挙 自由民主党届出パンフレット」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8)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을 위한 유식자 회의에서 해당 물자의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제 통신 연결에 필수적인 광해저 케이블의 부설·보수(서비스),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대처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2026. 1. 30.), 「経済安全保障の更なる推進に向けた提言」, p. 12.

라. 외교·안보 및 헌법 개정

■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방위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

- 일본은 지금까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으로 여기며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해옴.
  - ○ 일본은 글로벌 이슈 및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 등을 통해 미일 동맹 내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지지와 환영을 받아왔음.
  - ○ 2015년 아베(安倍)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관련법(일본명: 平和安全法制)」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신3요건'을 신설하여 무력 사용의 요건을 완화했음.[29]
  - ○ 2022년 기시다(岸田) 내각은 '방위 3문서(防衛三文書)'[30]를 개정하여 기존의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적극 억제 전략으로 전환하고 안보의 개념을 확장함. 또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기존의 1%에서 2027년까지 2%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제시함.[31]
- 다카이치 총리는 더욱 속도감 있게 방위력 강화 정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 방위비를 GDP 대비 기존의 1%에서 2% 수준으로 증액하는 시점을 1년 앞당겨 올해 3월 말까지 달성할 것으로 알려짐.[32]
  - ○ 2026년 안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방위 3문서'를 개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방위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에 제시된 5유형을 철폐하고,[33] 안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위장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국가 인텔리전스(intelligence)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정보회의 설치법(가칭)」을 조기에 추진하여 관저 직속의 국가정보국을 창설하겠다고 공약함.
  - ○ 중국과는 열린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도, 도발적인 행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 주장함.
- 다카이치 2기 내각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국내의 반대 목소리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당론으로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나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

-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전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따라 국가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가 부정되어 왔으며, 오로지 방위 목적의 자위대(自衛隊) 운용만이 인정되어왔음.

---

29) 内閣官房(2015), 「「平和安全法制」の概要」, https://www.cas.go.jp/jp/houan/150515_1/siryou1.pdf(검색일: 2026. 2. 9.).
30)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국가방위전략(国家防衛戦略), 방위력정비계획(防衛力整備計画)을 말함.
31) 防衛省(2022), 「「国家安全保障戦略」·「国家防衛戦略」·「防衛力整備計画」」,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index.html(검색일: 2026. 2. 9.).
32) Reuters(2026. 2. 9.), "Japan PM's big election win could mean more beef with Beijing," https://www.reuters.com/world/china/japan-pms-big-election-win-could-mean-more-beef-with-beijing-2026-02-09/?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2. 9.).
33) '5유형'은 일본이 완제품 방위장비를 해외로 수출할 때 허용되는 범위를 비전투 용도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구난(救難), 수송(輸送), 경계(警戒), 감시(監視), 소해(掃海, 위험물 제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철폐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면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평화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과거 아베 내각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

-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자위대 명기와 비핵 3원칙 수정을 추진하고자 함.
  ○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34]
  ○ 법률이나 헌법 조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 원칙으로 정착되어온 '비핵 3원칙(非核三原則),' 즉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수정 의지를 나타냄.[35]
-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헌법 조항이 아닌 '비핵 3원칙'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변경을 시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마. 사회 및 기타

1) 사회보장 개혁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와 국민 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의료·연금·복지 지출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비(예산 기준)는 2000년도 78.4조 엔(명목 GDP 대비 14.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0.7조 엔(명목 GDP 대비 22.4%)을 기록
- 사회보장급여비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약 60%)와 국가·지방의 재정부담(약 40%)으로 충당되는 구조이며, 양측의 부담이 모두 확대되는 추세임.
  ○ 후생노동성 예산의 대부분(약 98%)은 연금·의료·돌봄 등에 대한 국고 부담으로 구성된 의무적 경비로 제도 개편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며,[36] 이에 따라 국가 재정부담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도에는 일반세출의 56.2%(약 38.3조 엔)를 차지함.
  ○ 사회보장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부담률 또한 상승하고 있음(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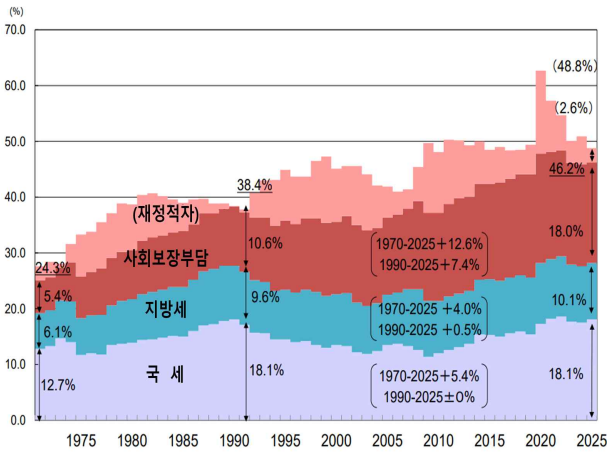
■ 자민당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유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의료수가를 30년 만에 대폭 인상하여 의료·복지·돌봄 전반에서 임금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할 방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2040년을 목표로 새로운 지역 맞춤형 의료·돌봄 체계를 구상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재편과 함께 마이넘버 제도를 활용한 급여 인프라 구축,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 조성 등 의료·돌봄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추진
- 사회보장과 조세를 연계한 일체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조세 감면과 현금 급부를 결합한 '급부형 세액공제(給付付き税額控除)'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초당파적 성격의 '국민회의'에서 논의할 계획

34) 自民党, 「衆院選 2026」, https://www.jimin.jp/election/sen_shu51/political_promise/manifesto/05/(검색일: 2026. 2. 9.).
35) 毎日新聞(2025. 11. 15.), 「高市首相「非核三原則」見直し議論へ 「持ち込ませず」が焦点」, https://mainichi.jp/articles/20251114/k00/00m/010/391000c?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2. 9.).
36) 厚生労働省, 「社会保障と財政」, https://www.mhlw.go.jp/stf/newpage_21511.html(검색일: 2026. 2. 8.).

○ 급부형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에는 감세 효과를, 납세액이 적은 중·저소득층에는 직접 급부를 제공하는 구조로, 정책 목적에 따라 급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응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5. 국민부담률(조세 부담·사회보장 부담)의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給付と負担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newpage_21509.html(검색일: 2026. 2. 7.).

표 3. 자민당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

주요 항목	주요 내용
임금 인상	· 의료·돌봄·복지 분야 종사자 임금 인상
사회보장 구조 개편	· 중·저소득자의 급부·부담 조정,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 논의 (‘급부형 세액공제’ 포함)
의료·돌봄 DX	· 마이넘버를 활용한 급여 인프라 구축 등 의료·돌봄 디지털화
지역 맞춤형 체계 강화	· 2040년을 목표로 지역 의료·돌봄 체계 정비
출산 지원	· 임산부의 출산비용 자기부담 해소

자료: 自民党(2026. 1. 21.), 「第51回衆議院選挙 自由民主党届出パンフレット」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외국인 정책

■ 최근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안보 우려와 사회 질서 문제, 형평성 논란 등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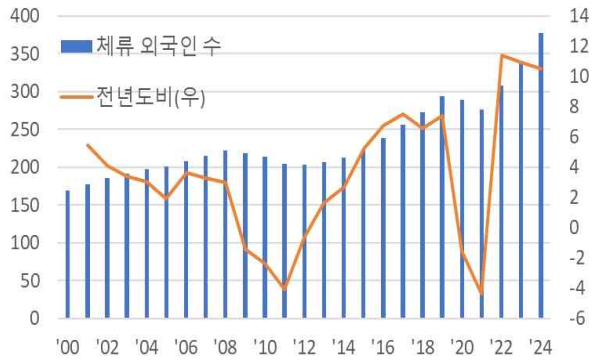
- 일본정부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대부터 외국인력 수용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민간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와 맞물려 중장기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
  ○ 일본 내 중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연 1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년 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37]
-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일부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의료비 미지급, 제도 악용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

■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생(共生)’ 중심에서 ‘질서와 관리’를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국·체류 관리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

-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인 정책을 치안·안보 및 사회 질서의 문제로 상정하고, 제도 악용과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
- 이에 따라 체류자격 심사 강화, 불법체류자 감축,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및 의료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제도의 ‘적정화’를 정책 핵심 과제로 설정

37) 일본 국내 외국인 고용자 수: 2015년 90.8만 명→2025년 257.1만 명으로 확대. 厚生労働省(2026), 「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状況まとめ(令和7年 10月末時点)」, p. 4.

그림 6. 일본 내 중장기 체류 외국인 추이



자료: 出入国在留管理庁 통계, 「在留外国人統計(旧登録外国人統計) 結果の概要」(검색일: 2026. 2. 9.).

표 4.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정책

주요 항목	주요 내용
체류자격 심사 강화 제도의 '적정화'	·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강화 · 불법체류 및 제도 악용에 엄정 대응 · 난민 심사기간 단축+송환 강화
특정기능·육성취로 제도 재조정	· 수용 상한 설정 및 규모 축소 · 체류 기간·가족 동반 제한 유지
외국인 토지·자산 관리 강화	· 외국인 토지 취득 규율 정비 · 국경·안보 관점의 관리 강화
귀화·영주 요건 엄격화	· 귀화: 원칙 5년→10년 이상 체류 · 일본 사회 '융화' 여부 중시

자료: 自民党(2026. 1. 31.), 「外国人の違法行為とルール逸脱に厳正対処高市政権が外国人政策を取りまとめ」(검색일: 2026. 2. 9.); 首相官邸(2026. 1. 23.),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바탕으로 정리.

3. 시사점

■ 자민당 '1강(强)' 중심의 정치 구조 재현(再現)은 한일 관계에 양면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견지해왔던 한일 관계 중시 노선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0월 총리로 선출된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웃 국가이다.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일한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언급함.[38]
  - ○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등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 반면 자민당 내부의 일부 극우적 이념과 역사관이 정책에 반영될 공간은 확대되었으나, 이를 견제할 야당 세력은 대폭 축소되어 역사 문제 및 일본의 군사 강국화, 외국인 정책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갈등할 가능성도 있음.
  - ○ △다카이치 총리 및 자민당의 보수적 색채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관계 강화 필요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카이치 2기 내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 기회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함.
  - ○ 한일 양국 사이에 인적 교류가 활발한 만큼, 일본의 외국인 관리 정책 강화 및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풍조가 한일 인적 교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8) 朝日新聞(2025. 10. 23.), 「韓国は重視、中国には「モノ申す」 高市氏、近隣国との関係どう構築」, https://www.asahi.com/articles/ASTBR2FRJTBRUHBI01CM.html(검색일: 2026. 2. 10.).

■ 중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일 양국이 강경 대응을 완화하고 관리 모드로 전환할 경우, 한·중·일 협력의 각종 플랫폼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대중국 강경 이미지를 보수층 결집에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선거가 끝난 만큼 경제 상황 등 현실 문제를 고려해서 중국과의 관계 완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 다카이치 총리의 탄탄한 정치 기반이 확인됐고, 중국의 강경한 대일 정책이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 만큼, 중국도 대일본 강경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중일 양국 사이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한중, 한일 관계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완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 중국 또한 현재 일본의 우경화를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로 여기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동향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대일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음.
  - ○ 중일 갈등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한중 및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사고가 필요함.

■ 경제안보 및 대미 고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한일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및 자민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나타냈고,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미일 관계가 더욱 밀착할 것으로 예상됨.
  - ○ 미일 관세 협상 및 방위비 논의 등이 한미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미일 관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우리의 대미 협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함.
  - ○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3월 중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양국 사이의 협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다카이치 2기 내각에서는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인텔리전스(정보 수집, 분석 등)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연구가 필요함.
  - ○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안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제정)」도 개정할 계획이기에, 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을 점검하고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 내용과 설계 과정 및 그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우리의 성장전략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은 공급력을 강화하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10년 장기 기금 신설, △복수 연도에 걸친 예산 편성, △다년간 적용되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중장기적 정책 수단을 제도화하고 있음.
  - ○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전략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사업 재편과 설비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 또한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의 정보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음. 이는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되, 민간의 견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39]

-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에서는 AI·반도체·조선·양자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로 한일 간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적극재정 기조와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이 향후 일본의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다카이치 2기 내각의 대응도 참고할 가치가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은 전략적 분야에 대한 선별적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중기적 재정 관리로 환수하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는 성장 효과에 앞서 재정 지출이 선행되는 구조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전략적 투자 확대가 병행될 경우 재정 운용상의 제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서 전략적 재정 투입의 성장 효과가 어느 수준에서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재정 여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가 향후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연구기관의 추계에 따르면 일본은 2040년경 약 1,100만 명 규모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활동과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임.[40]
- 외국인 정책이 관리·통제 강화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둘 경우,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에서 일본의 인재 유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우리도 일본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인력 활용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본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외국인 인력을 단기적인 수단이 아닌 육성·정착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 노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제도의 운영 과정 및 실제 성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KIEP

39) 특히 AI 시대의 산업정책은 하향식 산업 선택보다 질 높은 정책 설계와 집행 역량,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실험적 접근이 핵심 요건이 되고 있음.

40) リクルートワークス研究所(2023),「未来予測2040」, p. 4.